

지역사회 곳곳에 청년 선한 영향력 전파

전주시 청년희망단, 청년정책 발굴·제안·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청년정책 발굴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전주를 청년희망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는 제9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원 40명이 올해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곳곳에 매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9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됐으며,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의 18~39세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전주한옥마을 '쓰레기 줍기 환경 캠페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지역 보육원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청년정책 발굴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전주를 청년희망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희망단 활동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한서 소속 송경한 변호사(8기 청년희망단)와 이지는 JS건설팀연구소 대표(3기~5기 청년희망단)의 경우에는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며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전세사기 피해 등)

해결과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지역 실정에 맞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기를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9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서 발굴한 총 52개의 청년정책을 전주

시에 제안했으며 이 중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잭어 정책 △지역청년 JOB소통 사업 △청년통합지원팀 구축 △청년센터 서포터즈 운영 △취업지원사업 등을 실제 사업으로 반영돼 실제 추진됐다.

박술 제9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단장은 "청년희망단 단원들과 함께 지역 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청년희망단 활동에 대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선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중심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의 발전과 청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생각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접수

전주시, 16일까지 신청... 114억원 융자지원

전주시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주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마지막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의 신청 업체의 경우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지정 음식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 수출업체, 사회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시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우수창조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fanhr@korea.kr)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덕진구 팔파정로 164, 3층 기업지원사무소)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체납차량 영치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 성과

288대 영치 1억2300여만원 징수...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

전주시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시·구 세정부서 전 직원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288대를 영치해 1억 23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특별징수기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합동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이 전주시 전 지역 아파트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

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경매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의 번호판 영치 활동이 체납세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특별징수기간 이후에도 영치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세 징수 강화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자들에게는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스마트팜 전시로 미래 농업 가능성 알려

전주농기센터, 이팝나무 철길 개방행사 이어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 전시형 스마트팜 운영

전주시가 전시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한 걸음 앞선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9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지는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 전시형 스마트팜을 선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이팝나무 철길 개방행사에서 스마트 재배시설이 마련된 컨테이너 스마트팜 전시 공간에는 총 2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가며 전주 도심에서의 미래형 농업의 가능성을 직접 마주했다.

시민 참여형 체험이 진행된 현장에는 하루 평균 600여 명, 연인원 3500여 명이 모종심기 체험에 참여해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우리 지역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와 구아바 등 평소 보기 힘든 이국적인 작물들이 소개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자동화된 스마트팜 기술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이팝나무 철길 개방행사에서 스마트 재배시설이 마련된 컨테이너 스마트팜 전시 공간에 총 2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이번 스마트팜 운영에는 미래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한국농수산대학교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농작물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체험을 도우며, 전주의 미래 농업 유망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이번 전시형 스마트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을 단계별로 구축해 생산·유

통·체험·관광을 연계한 전주형 스마트농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전시형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이 결코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농업,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